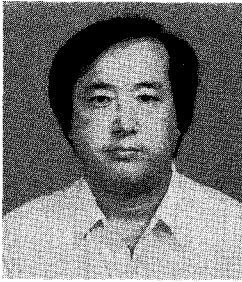


닭고기 등급제 및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안)에 대하여

‘선(先)시행 후(後)조치’라는 폐단은 이제 던져버려야...



김 영 근

금세기농장 대표
부산경남지부 육계분과위원장

양 계산물에 대한 등급제가 정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듯하다.

닭고기 등급제의 경우 지난 10월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만간 시범실시 후 2003년 실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닭고기에 대한 등급제 도입은 안전한 닭고기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을 산정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공히 바람직한 정책이므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전 단계는 무시하고 추진하려다 보면 무리가 따르고 시행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현재 국내 사육여건은 어떠한가? 과연 농가(생산자)가 정식 절차를 거쳐 검정된 병아리를 부화장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즉, 종계장, 부화장만이라도 국가적인 방역시스템이 잘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직도 검정되지 않은 병아리를 사육하는 현실에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종계장, 부화장, 육계농장, 도계장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체계가 바이오시큐리티나 HACCP의 연결고리로 어느 정도가 자리매김 되었을 때 닭고기 등급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국내 육계업은 사료가격 상승, 연료비 상승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입개방에 따른 수입 닭고기 증

가로 생산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를 전액 신청자 부담으로 계획하려 하는 것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만 가중시켜 사육기반을 더욱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물론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축산물 등급판정소가 내년부터 등급판정 수수료를 돼지 200원, 소 2,000원, 계란 1.5원 닭 15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돼지 마리당 20만원, 소 30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볼때 양계분야의 등급판정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무척 높게 책정된 것이며, 타축종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국가지원으로 등급판정이 이루어져왔으나 닭고기는 아직 시범실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축종보다 큰 부담을 지우며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닭고기 등급제는 생산농가의 소득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체 품으로 판정하는 등급 기준상 출하 농가의 등급 규정을 매기기가 어려워 자칫 농가의 소득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 수수료는 궁극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외

국에서도 수익자부담원칙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국가에서 전액 보조(WTO에서도 등급수수료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선 시행 후 조치’, 이런 폐단은 이제 고쳐져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육계산업에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하려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양계산물(닭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은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고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 예산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행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다 타당성 있는 닭고기 등급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육농가의 입지 및 도계장, 유통업체, 소비자 등 각 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여 시행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양계**